

'게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前 국방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구속...尹 공범 적시 긴급체포·구속 가능성 거론...피의자 소환 땀 현직 대통령 최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게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게임 선포와 이에 근거한 군·경찰 인력 투입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 혐의를 적용했는

데, 법원도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12·3 비상게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이 사건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군·경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뻗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장관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고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윤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란을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의 영장

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게임 전 과정을 주도 지원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곽중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게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제력을 동원해 국회의 게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상의해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거나 구속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12·3 비상게임이 초래한

엄청난 국민 불안과 혼란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내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다. 내란과 외환은 현직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예외 범죄이기도 하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예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검찰도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처음 있는 일로 권한대행 여부를 놓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군과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권위·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

● 12·3 비상게임 사태 관련

사망·파면·판결·사임 등으로 자격 상실(60일 내 대신) 재직 중 질병·요양·권한정지 등으로 직무 수행 불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2	3	4	5
한덕수 국무총리 고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6	7	8	9	10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구속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연립뉴스 *12월 11일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사진: 정부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게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尹대통령 긴급체포 가능하다"

법사위 박지원 질의에 답변...휴대폰 압수도 검토 정청래 요구엔 "체포 관련 충분한 의지 갖고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질의에 대해 "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당장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를 체포하러 갈 거냐, 안 갈 거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오 청장은 "의원님의 질의와 같은 말씀을 정밀하게 가슴으로 새겨듣는다.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오 청장은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의지 표명을 요구하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수사 절차들이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청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야 한다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는 "관련해서 조치하겠다"며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경찰과의 중복 청구를 이유로 공수처가 청구한 비상게임 관련 영장들이 여러 차례 기각된 데 대해 오 청장은 "중복 수사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중복 청구 관점이 아니라 시급한 비상사태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법원이) 영장을 잘 발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청장은 검

찰보다 먼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을 먼저 청구했는데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기각하는 바람에 (김 전 장관이) 새벽에 검찰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영장 없이 긴급 체포했다. /김진수 기자

'尹대통령 범죄 혐의 소명' 판단

● 대통령실 압수수색영장 배경 법원 발부위해 '범죄 의심 정황' 필요 경찰 국수본 신청해 중앙지검이 청구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에는 법원이 영장에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했다.

압수수색은 압수 물건을 수사기관이 점유하고 그 점유를 계속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수사기관의 대표적인 강제수사 수단으로 인식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선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 내용이어야 한다.

즉,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압수

수색 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범죄 혐의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때 필요한 소명의 정도는 구속영장 발부 때보다는 낮은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등에 대한 입증은 아니어도 이 같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담겼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 대상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압수수색의 사유 등을 구체화하게 돼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금지된다는 의미다.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경찰 국수본의 신청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추가조사 거쳐 구속 여부 판단...게임군 수뇌부 곧 소환

'12·3 비상게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게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40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서, 김 청장이 오후 5시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게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게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게임군의 게임진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 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게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게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인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게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은 게임 당일 조 청장과 김 말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인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내란 사건에 휘말리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비상게임 사태 사과

국회 긴급현안질의 출석 "국무위원 전원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게임 사태'에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게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12월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이후에 (게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반대 사유를 묻자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신인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들의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무회의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것은 게임의 절차적 흠결을 보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과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게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